

독일 통일 교훈과 한반도 평화통일 비전

양창석* (통일부 상근회담대표)

같은 분단국인 독일이 통일된 지 20년이 지났다. 동독 주민의 대규모 탈출과 월요 데모로 촉발된 동독 공산정권의 붕괴, 동·서 냉전구도의 해체, 서독 정치지도자의 역량과 경제적 능력 등 3가지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독일의 통일이 가능했다.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어 탈출민이 급속히 증가하고, 동독 경제가 붕괴 위기에 처하고 시민혁명에서 '통일'을 요구하게 되자 서독의 콜 수상은 조기 통일을 추진하게 되었다. 독일 통일이 성공하게 된 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의 지지, 경제적 능력, 정치지도자들의 통일 의지와 외교적 역량, 원칙에 바탕을 둔 실질적인 교류협력 정책, 고르바초프의 등장, 자결권 원칙 행사 등을 들 수 있다.

독일의 통일을 보고 우리도 통일을 달성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독일 통일의 성공 요인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우리도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다각도로 준비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민족 자결권의 명문화, 경제력 확충, 국제적 친분과 신뢰 구축,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정책 추진, 남·북 간 대화의 끈 유지, 분야별 통일 준비 구체화 등이다. 통일은 우리 민족에게 선진국으로 응비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따라서 우리의 정치지도자들은 통일에 대한 강한 의지와 비전을 갖고 경제적·외교적 역량을 키워 나가야 할 것이다.

목 차

1. 서론: 독일 통일 과정
2. 독일 통일을 가능하게 했던 성공 요인
 - 가. 서독 정부의 서구 편입 정책과 미국의 강력한 지지
 - 나.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우월한 서독 체제의 강한 흡인력
 - 다. 콜 수상을 비롯한 서독 정치 엘리트들의 통일 의지와 외교적 역량
 - 라. 원칙에 바탕을 둔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교류협력 정책 추진
 - 마. 고르바초프의 등장과 소련의 대동구 정책 변화
 - 바. 자결권 원칙의 고수
3. 한반도 평화통일 준비와 비전
 - 가. 민족 자결권의 명문화
 - 나. 경제적 능력 확충
 - 다. 국제적 친분과 신뢰 구축을 위한 장기적 통일 외교 전개
 - 라.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정책 추진
 - 마. 남·북 간 대화의 끈을 유지
 - 바. 분야별 통일 준비 구체화
4. 결론

1. 서론: 독일 통일 과정

- 우리와 같은 분단국이던 독일은 구동독 지역의 5개주를 서독의 기본 법 관할 영역에 가입(beitritt)시킴으로써 통일을 달성했음.
 - 서독은 동독 주민의 대규모 탈출과 월요 데모로 촉발된 통일의 기회를 잘 활용하여, 자유민주체제에 의한 평화적 통일을 달성했음.
- 독일의 통일은 세 가지 중요한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달성될 수 있었음.
 - 동독 시민혁명과 공산정권의 붕괴.
 - '89.5. 헝가리와 오스트리아 국경 일부 개방으로 동독 주민들의 대규모 탈출 촉발, 10월부터는 하루 평균 2,000여 명이 탈출, 심각한 젊은 기능 인력 유출 초래.
 - 동독 내부에서 5월 지방선거 부정을 계기로 저항운동 시작. 10월 초부터 월요 데모 확산. 시위구호도 초기 여행자유화·민주화에서 '통일'(11.20.)로 발전.
 - 10.18. 호네커 서기장 실각, 동독 지도부의 개혁 추진 지연으로 내부 상황 악화. 12월 초 '원탁회의' 구성. 모드로 수상은 고르바초프에게 동독의 국가 붕괴를 인정하고 통일을 추진하겠다고 선언(1.30. 모스크바).
 - 고르바초프의 등장과 동·서 냉전구조의 해체.
 - 동독 지도부에 대한 고르바초프의 공개 개혁 촉구, 소련군의 동독 시위 불개입 및 유혈 진압 반대, 브레즈네프 독트린 폐기 등으로 동독 내 시위 확산.
 - 나토 런던 정상회담('90.7.5.~6.)을 통해 바르샤바 조약기구와 공동선언 제안, 소련의 안보 우려 해소. 그 결과 고르바초프가 통일 독일의 나토 잔류를 수용, 통일의 대외적 장애 해소.
 - 서독의 경제적 능력과 정치 엘리트들의 통일 의지와 외교적 수완.
 - 콜 수상은 동독 주민의 탈출 증가, 동독 정치·경제 상황의 악화, 동독 주민의 통일 요구 등으로 단계적 통일에서 조기 통일로 정책 전환, 통일의 이니셔티브(initiative) 장악.
 - '90.3.18. 동독 최초 자유 총선거에서 '조기 통일'을 공약으로 내세운 '독일동맹'이 승리. 동독 인민의회가 동독 지역주의 서독 연

방 가입 결정.

- 콜 수상은 기민한 외교로 부시 미국 대통령의 전폭적 지지를 확보. 통일에 반대하던 영국과 프랑스를 설득하는 한편, 대소 경제 지원 및 안보우려 해소를 통한 고르바초프의 통일 수용을 유도하는 데 성공.
- 독일 통일은 동독 산업의 붕괴 및 실업자 증가, 통일비용 부담 등의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어야 함.
 - 무엇보다도 통일이 평화적으로 달성되었으며 동독 주민들에게 자유를 안겨준 역사는 그 어떤 실수나 비난으로도 평가 절하될 수 없는 최고의 절대가치이기 때문임(『독일통일백서 2010』).
- 독일의 통일을 가능하게 했던 성공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고, 이를 토대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시사점과 준비 사항을 도출하고자 함.

2. 독일 통일을 가능하게 했던 성공 요인

가. 서독 정부의 서구 편입 정책과 미국의 강력한 지지

- 초대 아데나워 수상은 적극적인 서구 편입을 통한 ‘힘의 우위 정책’을 표방함.
 - 서독과 서방 제국의 정치적·경제적 우월성이 소련을 지치게 만들고 동독의 억압체제를 붕괴시키게 될 것이라고 판단(자석이론), 스탈린의 중립화 제안(1952년) 거부.
- 소련의 신형미사일 SS-20 배치에 대응한 1979년 나토의 ‘이중결정(소련과 중거리 미사일 철거 협상을 진행하되 퍼싱 II 미사일도 배치)’에 동의, 미사일 서독 배치(1983년~) 등 서방 동맹체 강화 및 서독의 신뢰를 제고함.
 - 콜 수상은 회고록에서 나토의 이중결정과 퍼싱 II 미사일 배치 때문에 군비경쟁 촉진을 통해 서방 동맹체를 와해시키려는 소련의 시도가 좌절되고 고르바초프의 개혁과 개방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
- 1989년 서독은 자유민주주의 공동체인 EC와 나토의 일원으로 불변

*독일의 통일은 동독
시민혁명과 공상정권의
붕괴, 고르바초프의
등장과 동·서 냉전
구조의 해체 및 서독의
경제적 능력과 정치
엘리트들의 통일 의지와
외교적 수완이라는
세 가지 중요한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달성될 수 있었음*

**서독의 튼튼한
경제력은 콜 수상이
조기 통일을 결정할 수
있는 절대적 토대가 됨**

하며 독일 통일은 유럽의 통일 구도 속에서 추진하겠다고 약속, 서구 우방국의 우려를 해소함.

- ‘통일 독일의 나토 잔류’ 약속을 통해서 나토 회원국들, 특히 미국의 강력한 지지 확보.
- 부시 미국 대통령은 폴란드, 헝가리, 동독 등에서 일어난 사태발전에 대응하여 유럽을 평화와 자유 속에 통일시키려는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독일 통일 문제에 접근(특히, 통일을 향한 독일 국민들의 열망을 외교적 동력으로 활용).

- ‘2+4 회담’ 등 통일 관련 핵심적 사안에서 부시 미국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을 확보함.
 - 부시 대통령과 콜 수상을 비롯한 미국과 서독 정치 엘리트들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영국, 프랑스 등 우방국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소련이 통일을 수용하도록 설득.
 - 미국은 소련의 우려를 만족시킬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정리, 서독과 긴밀히 협의하여 ‘2+4 회담’을 성공적으로 진행.

나.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우월한 서독 체제의 강한 흡인력

- 서독은 의회 민주주의와 다원주의를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로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모범적인 복지국가를 실현함.
- 서독의 튼튼한 경제력은 콜 수상이 조기 통일을 결정할 수 있는 절대적 토대가 됨.
 - ’88년 3.8%, ’89년 4.5% GNP 성장, ’88년 GNP 대비 정부 재정적자 0%, ’85~’89년간 매년 1,000억 마르크 이상 무역 흑자, ’89년 120만 명 추가 고용 창출(프리스니츠 전 내독성 차관, 통일 후 내무성 차관).
 - ’90년 1월 서독 연방재무성 장관 주재 비밀회의에서 서독 마르크화의 동독 도입을 통한 조기 통일 추진이 재정적으로 가능하다고 결론.
 - “서독의 경제력과 재정 상태가 역사상 유일무이하게 통일에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프리스니츠 차관).”
- 서독의 튼튼한 경제력은 고르바초프의 독일 통일 지지와 통일 독일의 나토 잔류 수용을 이끌어 내는 지렛대 역할을 함.
 - 콜 수상은 경제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고르바초프의 개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각종 경제적 지원(’90년 초 10억 마르크 상당 식량, ’90

년 6월 50억 마르크 차관, 소련군 철수 관련 150억 마르크 재정 지원 등)을 제공.

- 서독은 통일의 대외적 문제 해결의 최대 쟁점인 통일 독일의 나토 잔류에 대한 고르바초프의 동의('90.7.14.~16. 독·소 정상회담)를 얻어내고 소련군 철수 문제도 해결.
 - 서독 측은 소련과의 협상 시, '대소 경제적 지원은 독일 통일 문제의 해결에 기여할 일괄타결의 일부'이라는 점을 강조.
 - 고르바초프도 "소련에 대한 지원금은 소련뿐만 아니라 독일 통일을 돕는 것"이라고 언급.

다. 콜 수상을 비롯한 서독 정치 엘리트들의 통일 의지와 외교적 역량

- 콜 수상은 동독 주민 탈출과 베를린 장벽 개방 등 사태 진전을 통일의 기회로 인식하고 탁월한 정치적 감각과 외교적 능력으로 통일에 성공함.
 - 콜 수상은 베를린 장벽 개방 환영식 연설에서 '미래를 위해 중요한 것은 독일이고, 통일이고 권리와 자유'라고 강조.
 - 같은 행사에서 사민당 정치인들은 독일 통일에 대해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며, 몸퍼 베를린 시장(사민당)은 "우리의 관심사는 재회이지 재통일이 아니다"고 강조.
 - 월요 데모(11.20.)에서 통일 구호가 등장하고, 독일 문제가 미·소 몰타 정상회담(12.2.), 브뤼셀 나토 정상회담(12.3.) 등에서 국제적 의제로 대두되자, 콜 수상은 독일 통일을 위한 이니셔티브 필요성을 인식하게 됨.
 - '89.11.28. '독일과 유럽 분단 극복을 위한 10단계 방안'을 발표, 유럽 통합에 맞춰 '국가 연합적 구조'를 통한 단계적 통일 추진 의사 표명.
 - 10 단계 방안 중 주요 내용은 조약공동체 형성 고려(4단계), 국가 연합적 구조 발전(5단계), 동독의 EC 공동시장 가입(7단계), 유럽 평화 속에 자결권에 의한 재통일 실현(10단계)임.
- 동독 최초 자유 총선거('90.3.18.) 직전에 1:1 화폐교환을 통한 조기통일 추진을 결정, 기민당이 주축이 된 독일동맹의 압승에 기여함.
 - 총선거를 통해 구성된 드메지어 민주정부와 화폐통합 및 통일조약 협상.
- '89년 헝가리 및 체코 주재 서독 대사관 체류 동독 탈출민의 인도를

콜 수상은 베를린 장벽 개방 환영식 연설에서 '미래를 위해 중요한 것은 독일이고, 통일이고 권리와 자유'라고 강조

**동·서독 간의 끈끈한
인적·물적 교류와
협력은 주민 간의
소통을 증진시키고
동독 주민들에게 서독의
풍요와 자유를 알게
되는 기회를 제공함**

위한 외교 교섭에 성공, 동독 평화 혁명을 촉발시킴.

- 헝가리와 비밀 정상회담('89.8.25.)을 통해 동독과의 '여행협정' 파기, 탈출민의 동독 송환 중단 약속 확보.

- 콜 수상, 겐서 외상 등 서독 정치 지도자들은 미국, 소련의 counterpart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통일의 대외적 장애를 해소함.
 - 콜 수상과 부시 미국 대통령은 좋은 인간적 관계와 신뢰를 바탕으로 정상회담과 전화, 서신을 통해 의견을 교환, 공동 전략을 모색.
 - 콜 수상은 부시 대통령의 지원으로 나토 런던 선언을 통해 소련의 안보 우려를 해소함으로써, 통일 독일의 나토 잔류에 대한 고르바초프의 동의 유도.
 - 런던 선언은 나토-바르샤바 공동 선언 제안, 유럽 재래식 무기 감축, 핵무기를 최후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새로운 전략 채택 등 포함.

라. 원칙에 바탕을 둔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교류협력 정책 추진

- 동·서독 간의 꾸준한 인적·물적 교류와 협력은 주민 간의 소통을 증진시키고 동독 주민들에게 서독의 풍요와 자유를 알게 되는 기회를 제공함.
 - 사민당 브란트·슈미트 수상 정부가 추진한 '작은 걸음 정책'이 호네커 정권의 연명을 돕고 통일을 지연시켰다는 비판도 존재.
- 콜 수상은 대동독 경제지원('82~'83년 19억 5천만 마르크 차관 등)과 호네커의 서독 방문 등을 계기로 동독 주민의 여행 자유화와 인권개선 등을 요구함.
 - 호네커의 여행제한 완화로 '80년대 중반부터 '89년간 동독 성인 4명 중 1명이 서독이나 서베를린을 방문, 서독의 자유와 풍요에 동경심을 갖게 됨.
- 서독 기민당 정부의 '유일대표권' 원칙 고수로 대규모 동독 탈출민의 신속한 수용과 정착 가능, 통일의 단초를 마련함.
 - 호네커는 동독의 고유 국적 인정을 지속적으로 요구. 야당인 사민당과 일부 언론도 동독의 별개 시민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
 - 콜 수상은 '동독의 국적인정 요구를 받아들였다면 동독 탈출민은 외국인 신분으로 정치적 망명을 신청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회고.

마. 고르바초프의 등장과 소련의 대동구 정책 변화

- 고르바초프는 브레즈네프 독트린을 폐기, 동독 주민의 탈출과 평화적 시민혁명을 촉진시킴.
 - '89.6. 독·소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에서 “모든 국가는 그 스스로 정치 사회 체제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고 명시.
 - '89.7. 스트라스부르 유럽회의에서 고르바초프는 유럽 국가들의 정치적·사회적 질서는 “전적으로 그 인민 자체의 문제요, 그들이 선택할 문제”라고 선언.
 - '89.10. 바르샤바 조약기구 외무장관 회의에서 브레즈네프 독트린을 공식 폐기.
 - 고르바초프의 ‘신사고 외교’는 헝가리와 폴란드 정부에 행동의 자유를 제공, 동독 주민의 대규모 탈출 촉발.
 - 고르바초프는 '89.9.11. 헝가리의 오스트리아 국경 전면 개방을 허용.
 - 고르바초프는 동독 내 월요 데모에 대한 소련군의 개입과 동독 정부의 무력 진압에 반대, 동독의 시민혁명이 평화적으로 진행, 동독 공산정권의 붕괴 초래.
- 고르바초프의 공개적 동독 개혁 요구('89.10.7. 동독 정권 수립 40주년 기념식)는 개혁을 요구하는 동독 시민들에게 큰 용기를 주어 시민혁명의 기폭제로 작용함.

바. 자결권 원칙의 고수

- 서독 기본법 전문은 ‘전체 독일 민족은 독일의 통일과 자유를 자유로운 자결권 행사를 통해 완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
 - 콜 수상은 독일 통일이라는 목표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고 회고하면서, 자유 체제하의 독일 통일의 전제는 항상 자결권의 자유로운 행사라고 강조.
- 콜 수상은 소련을 비롯한 전승국들의 우려를 고려, 동독인들의 자결권을 강조함.
 - 베를린 장벽 개방 후 11월 11일 고르바초프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동독 동포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당연히 존중할 것”이라고 설명.
 - 11월 18일 파리 유럽공동체 정상회담에서도 동독인의 자결권을 재

고르바초프의 브레즈네프 독트린 폐기는 동독 주민의 탈출과 평화적 시민혁명을 촉진시킴

북한의 민주화 및
우리의 통일 과정에서
중국 등 주변국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헌법에
'자결권'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차 언급.

- 실제로 독일 통일은 동독 최초 자유선거를 통해 탄생한 동독 인민 의회의 자발적 결정에 따라 달성됨.
 - '90.3.22. 인민의회는 서독 기본법 제23조에 의거하여 동독이 기본법의 관할지역(독일연방공화국)에 가입하는 방식에 의한 통일을 추진하기로 공식 결정.
- 콜 수상은 자결권 행사와 관련 부시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와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동의를 확보함.
 - 부시 대통령은 '89년 9월 18일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에서 “통일은 독일인들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며, 독일 통일에 대해 결코 우려하지 않는다”라고 밝힘.
 - 고르바초프도 “독일인들이 자결권 행사를 원한다면 소련으로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고 언급.

3. 한반도 평화통일 준비와 비전

가. 민족 자결권의 명문화

- 유엔 헌장과 1975년 헬싱키 최종의정서 등에서는 민족의 자결권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 북한의 민주화 및 우리의 통일 과정에서 중국 등 주변국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헌법에 '자결권'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를 '대한민국은 자결권을 바탕으로 통일을 지향하며...'로 수정.
 - 국제법적으로 북한이 주권국가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자결권 존중 필요.
 - 독일 통일의 대외적 걸림돌을 해결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외교적 동력은 동독 주민들의 통일 열망이었음(Robert Zoellick).
 - 북한의 민주화를 통해 자유·비밀 선거 보장을 우선적으로 관철시킴으로써 북한 주민들이 남한과의 통일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임.

나. 경제적 능력 확충

- 통일의 기회가 올 때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튼튼한 경제적 역량을 확충해야 함.
 - 서독의 경제력은 동독 주민들의 동경심 유발, 소련의 통일 수용을 유도하기 위한 지렛대 역할, 조기 통일을 위한 재정 여건 등을 충족, 통일 달성에 기여.

- 통일 비용의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함.
 - 계층 간, 세대 간, 지역 간(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통일 비용 부담 검토를 토대로 재정차입, 세금 부과 등 재원 조달 방안 마련.

- 통일을 염두에 둔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이 필요함.
 - 사회복지 대중융합주의(populism)는 막대한 통일 비용을 초래할 위험 내포.
 - 독일의 경우 세계 최고의 서독 사회복지 수준을 동독에 그대로 이전한 결과 20년간 전체 통일 비용(2조 1,000억 유로)의 52%(1조 1,000억 유로)를 사회복지 분야에 사용.

- 통일 비용이 부담이나 소모가 아니라 편익과 투자라는 인식 확산을 통해 통일 기피증을 차단할 필요가 있음.
 - 국방비, 외교적 대결, 긴장 고조, 이산가족 등 분단 비용이나 고통 해소.
 - 인구 1억의 ‘규모의 경제’ 기대, 철도·도로로 중국·러시아와 유럽 대륙과 연결함으로써 물류비용 절감.
 - 북한 지역을 첨단 산업 기지로 개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
 - 제2차 세계대전 후 ‘마셜 플랜’을 통해 서독의 산업 경쟁력을 제고시킴으로써 유럽의 강국으로 부상. 독일 통일 이후 신규 투자 덕분에 구동독 지역의 쾰니츠와 드레스덴이 첨단 산업의 메카로 발전.

통일 비용이 부담이나 소모가 아니라 편익과 투자라는 인식 확산을 통해 통일 기피증을 차단할 필요가 있음

다. 국제적 친분과 신뢰 구축을 위한 장기적 통일 외교 전개

- 우리의 통일 과정에서 중국, 미국 등 주변 강대국이 개입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정계·경제계·학계 등 전 분야에 걸쳐 네트워크 구축 필요.

**통일을 위해서 북한의
미래와 한반도 통일을
결정할 북한 주민들의
생각을 바꾸는 노력이
필요함**

- 정치지도자, 관료(외교관 포함)들 간의 좋은 인간적 친분과 신뢰 형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 경주(성공적인 외교는 장기적인 행동의 과정과 축적)
- 미국과의 동맹 관계 강화를 통해 외교적 장애를 해소해야 함.
 - 미국과는 자유와 민주주의 확산이라는 목표 공유.
 -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통일 과정에서 대두되는 외교적 문제(중국의 개입 포함)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
- 중국과의 전략적·경제적 파트너십을 강화, 상호 이익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킴.
 - 한반도 통일이 중국의 안보 불안을 야기하지 않고 평화 정착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윈-윈’전략을 구체적으로 마련.
 - 탈북자의 강제 송환이 보편적 인권 규범에 맞지 않음을 지속 설득.

라.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정책 추진

- 북한의 미래와 한반도 통일을 결정할 북한 주민들의 생각을 바꾸는 노력이 필요함.
 - 북한 주민의 생활수준과 인권 개선, 외부 정보 접근성 강화,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 등.
 - 독일 통일은 동독 주민들의 평화 혁명(대규모 탈출·월요 데모)과 민주적 절차에 따른 조기 통일 선택이 없었으면 불가능.
 - 인도적 지원을 비롯한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고통 해소 및 대남 적개심 완화, 남한의 자유와 풍요에 대한 동경심 유도.
 - 대규모 지원은 이에 상응하는 북한 측의 양보(이산가족, 납북자 문제 등)와 철저한 모니터링을 전제로 해야 할 것임.
- 북한 주민들에게 자결권에 따른 선택의 기회가 주어질 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하의 통일을 선택하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북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북한식의 새로운 사회주의 실험’이 아니라 ‘남한과 같은 자유와 번영’이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함.

마. 남·북 간 대화의 끈을 유지

- 동·서독 정부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대규모 탈출 사태와 시위 등

긴급 상황을 평화적으로 관리

- '89년 여름까지 동·서독 간에는 경제, 교통, 통행, 사법 공조 등 22개 분야의 공동위원회나 전문위원회 회담이 진행.
 - 콜 수상은 동독의 호네커 서기장·크렌츠 서기장·모드로 수상과 직·간접 접촉, 동독의 안정화 및 개혁 문제를 논의.
- 북한 위기 상황 발생 시 남·북 간 대화를 통한 해결 노력이 중요함.
- 북한의 사태 발전을 정확하고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며, 상호 간 오해와 불신을 방지함으로써 상황을 평화적으로 관리 가능.
 - 대북 긴급 지원 제공과 함께 민주화 개혁과 시장경제 체제 도입 촉구.
 - '민족 자결권'을 내세워 주변국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남·북한 간 대화를 통한 해결 노력 과시 필요.

바. 분야별 통일 준비 구체화

- 북한에 대한 구체적 정보 수집 및 체계화 작업이 필요함.
- 산업·인문지리·인물 등 북한의 각 분야별 실태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 분야별 북한 전문가 양성
- 다양한 상황에 따른 분야별 통합 준비 구체화
- 통합의 속도(단계적 vs. 일시적), 법적 통합 방법, 군사통합, 심리적 통합 문제 등.
 - 재산권 처리, 화폐 교환율, 부실기업 청산, 실업자 대책, 북한 지역 투자유인책, 정권협조자 사면 여부, 반인권적 범죄 처리 등.
- 통합 과정을 총괄·조정할 정부기구 필요성 검토

독일과 한반도의 통일 사이에는 동독 지도부가 '별개 국가', '별개 민족'을 강조한 반면, 북한 정권이 '통일을 민족적 과제'로 지속 선전에 온 점이 차이가 있음

4. 결론

- 독일과 한반도의 통일 사이에는 유사점도 있지만 큰 차이점이 있음.
- 6·25 전쟁으로 남·북 간 적대의식과 불신 상존, 북한 주민의 외부 정보 차단, 북한 군부와 보위부 등 체제 보위세력의 호전성 등이 통일의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동독 지도부가 '별개 국가', '별개 민족'을 강조한 반면, 북한 정권이

**향후 통일을 위해서
정부·민간 차원에서
통일 외교 노력을
강화함으로써 주변국의
신뢰를 쌓아가는 한편,
개별국가의 이해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할
것임**

‘통일을 민족적 과제’로 지속 선전해 온 것은 긍정적 측면임.

- 우리 민족이 선진국으로 용비하기 위한 중요한 필요조건은 바로 통일임.
 - 이미 우월성이 입증된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체제로 제대로 통일이 돼야 선진 통일국가로 발전할 수 있음.
 - 독일 통일 과정에서도 제기된 적이 있는 소위 ‘제3의 길’은 밝은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없을 것임.
 - 통일의 기회는 언젠가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미리 철저히 준비해 둬으로써 편익을 최대화하는 평화통일을 달성해야 할 것임.
- ’89년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따른 단계적 통일방안 추진과 함께, 갑자기 다가올 통일의 기회에도 대비해야 할 것임.
 -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 주민의 생활수준을 개선하는 한편,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해 나가야 할 것임.
 - 동시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통합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정치 지도자들의 통일 의지와 비전이며, 통일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적·재정적 역량일 것임.
- 평화 통일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변국의 협조뿐만 아니라 국내적 여론 통합이 매우 중요함.
 - 정부·민간 차원에서 통일 외교 노력을 강화함으로써 주변국의 신뢰를 쌓아나가는 한편, 개별국가의 이해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할 것임.
 - 국내적으로 대북정책과 통일문제에 대한 남남 갈등을 해소하고 국론을 통합해 나가는 일이 큰 도전 요인일 것임.
 - 주변국가와 남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통일 홍보 전략도 미리 수립해 둘 필요가 있음.

기획 및 감수: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편집: 고정선(제주평화연구원 연구원)

오은정(제주평화연구원 인턴)

저자 약력

■ 양창석

現 통일부 상근회담대표. 경북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런던정경대(LSE) 소련정치학 석사 및 단국대 국제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음. 1982년 통일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며, 1992년 4월부터 3년 6개월간 주독일대사관 통일연구관 및 에버트 재단 파견 근무를 통해 독일통일 과정을 연구했음. 주미국대사관 통일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북한 정책과장, 통일부 대변인 및 사회문화교류 본부장, 정세분석 국장 등을 역임했음. 저서로 『브란덴부르크 비망록: 독일통일 주역들의 증언』(늘봄플러스, 2011)이 있음.

주석

* 이 글은 전적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의 저서 『브란덴부르크 비망록: 독일 통일 주역들의 증언』(늘봄플러스, 2011)을 토대로 작성한 것임.

참고문헌

국내문헌

〈단행본〉

김주일 옮김. 헬무트 콜 저. 「나는 조국의 통일을 원했다」. 서울: 해냄. 1998.

염돈재. 「독일통일의 과정과 교훈」. 서울: 평화문제연구소. 2010.

오정환 옮김. 엘리자베스 폰드 저. 「장벽을 넘어서」. 서울: (주)한국논단. 1994.

윤여덕 옮김. 호르스트 텔치 저. 「329일: 독일 통일의 기적을 만든 결정적 순간들」.
서울: (주)한독산학협동단지. 2007.

한우창 역. 볼프강 쇼이블레 저. 「나는 어떻게 통일을 흥정했나」. 서울: 동아일보사.
1992.

허선 옮김. 호르스트 지버트 저. 「통일 그리고 경제의 모험」. 서울: 을유문화사. 1993.

〈정부간행물 및 기타 자료〉

국토통일원. 「독일 통일의 전개과정」. 국토통일원. 1990.

법제처. 「독일 통일관계법 연구」. 법제처. 1991.

_____. 「독일 통일관계법 연구 II」. 법제처. 1992.

유복근 번역. “2+4: 독일 통일의 교훈.” Robert B. Zoellick 저. “Two Plus Four:
The Lessons of German Unification.” 외교통상부 조약국. 「국제법 동향과
실무」. 통권 제11호. 2005.

주독 한국대사관. 「독일 분단으로부터 통일까지 약사」. 주독 한국대사관. 1991.

_____. 「동·서독 교류협력 사례집」. 주독 한국대사관. 1993.

_____. 「동·서독 화폐통합」. 주독 한국대사관. 1993.

_____. 「독일 통일백서」. 주독 한국대사관. 1994.

통일원. 「동독붕괴와 서독 정부의 조치」. 통일원. 1994.

국외문헌

〈영문〉

Ash, Timothy Garton. *In Europe's Name: Germany and the Divided Continent*.
London: Jonathan Cape. 1993.

Bush, George and Brent Scowcroft. *A World Transformed*. New York: Alfred A.
Knopf. 1998.

Hancock, M. Donald and Helga A. Welsch. Ed.. *German Unification: Process &
Outcomes*. Boulder: Westview Press. 1994.

- McAdams, A. James. *Germany Divided: From the Wall to Reunificati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 Merkel, Peter H.. *German Unification in the European Context*. University Park, Pa.: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1993.
- Szabo, Stephen F.. *The Diplomacy of German Unification*.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2.
- Zelikow, Philip and Condoleezza Rice. *Germany Unified and Europe Transformed: A Study in Statecraf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95.

<독문>

- Kiessler, Richard und Frank Elbe. *Ein runder Tisch mit scharfen Ecken: Der diplomatische Weg zur deutschen Einheit*. Baden-Baden: Nomos Verlagsgesellschaft. 1993.
- Schaeuble, Wolfgang. *Der Vertrag: Wie ich ueber die deutsche Einheit verhandelte*. Bonn: Deutsche Verlags-Anstalt. 1991.
- Teltschik, Horst. *329 Tage: Innenansichten der Einigung*. Berlin: Siedler Verlag GmbH. 1991.
- Waigel, Theo und Manfred Schell. *Tage, die Deutschland und die Welt veraenderten: Vom Mauerfall zum Kaukasus, Die deutsche Waehrungsunion*. Muenchen: Ferenczy bei Bruckmann. 1994.
- Weidenfeld, Werner und Karl-Rudolf Korte (Hrsg.). *Handwoerterbuch zur deutschen Einheit*. Frankfurt: Bundeszentrale fuer politische Bildung. 1993.

<독문 정부간행물 및 기타 자료>

-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Jahresbericht der Bundesregierung zum Stand der Deutschen Einheit 2010*. Berlin. 2010.
- Bundesministerium fuer innerdeutsche Beziehungen. *Texte zur Deutschlandpolitik*. Reihe III/Band 7 - 1989.
- Bundesministerium fuer innerdeutsche Beziehungen. *Texte zur Deutschlandpolitik*. Reihe III/Band 8a - 1990.
- Bundesministerium fuer innerdeutsche Beziehungen. *Texte zur Deutschlandpolitik*. Reihe III/Band 8b - 1990.
- Deutscher Bundestag. *Materianlien zur Deutschen Einheit und zum Aufbau in den neuen Bundeslaendern*. 12 Wahlperiode. Drucksache 12/6854. 1994. 2.8.
- Press- und Informationsamt der Bundesregierung, Deutschland: *Von der Teilung zur Einheit*, 1994.

JPI 정책포럼 현황

- 박동훈 『경제위기이후 중·미관계 변화와 한반도』 (2011년 6월)
- 임수호 『북·중경협 현황과 전망』 (2011년 6월)
- 이기현 『중국의 대북정책과 북·중동맹의 동학』 (2011년 5월)
- 박상현 『에너지 안보의 동학과 일본 원자사태』 (2011년 5월)
- 김종선 『원자력 사고의 국제 대응체제의 강화 필요성: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2011년 5월)
- 이면우 『대지진 이후의 일본 위상과 동북아질서』 (2011년 4월)
- 김병로 『한반도 통일: 비전과 전략』 (2011년 4월)
- 김동성 『북한 정치경제 체제의 본질과 남북교류협력사업 방향』 (2011년 4월)
- 김종섭 『미중관계의 정상화와 대만』 (2011년 3월)
- 고성준 『새로운 통일 필요성 논리의 개발: 청소년 대상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2011년 3월)
- 이홍섭 『러·중 군사협력의 동향과 장래』 (2011년 3월)
- 김두진 『동아시아 경제통합과 거대기업의 역할: EU사례의 함의와 적용』 (2011년 2월)
- 염돈재 『독일통일의 쟁점과 한반도 통일에의 시사점』 (2011년 2월)
- 정영태 『서해해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방안』 (2011년 2월)
- 김태환 『21세기 신공공외교와 포럼외교』 (2011년 1월)
- 안찬일 『북한의 다각적 평화공세와 체제전환 가능성』 (2011년 1월)
- 황지환 『남북관계의 국제정치』 (2011년 1월)
- 성원용 『러시아 극동지역의 전력공급체계와 남-북-러 전력계통 연계』 (2010년 12월)
- 고상두 『동북아 다자협력체 구축조건: 통일독일의 경험이 주는 함의』 (2010년 12월)
- 김갑식 『북한 당대표자회와 김정은 후계체제 전망』 (2010년 12월)

- 박홍영 『전후 일본 ODA 정책의 변화상: 한국에 주는 함의』
(2010년 11월)
- 최희식 『중일 첨각열도 해양영토분쟁: 평화적 관리 방식의 전환기?』
(2010년 11월)
- 김미경 『일본의 반핵평화주의와 안보현실』 (2010년 11월)
- 김수암 『탈북자의 현황 및 인권』 (2010년 10월)
- 원동욱 『중국 대외원조의 현황과 추세: ‘불량국가’ 지원과 그 시사점』 (2010년 10월)
- 손기웅 『독일통일 20주년에 비춰본 한반도통일의 과제와 전망』
(2010년 9월)
- 이선진 『중국의 대미안마 전략』 (2010년 9월)
- 최경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북한의 변화 전망』 (2010년 9월)
- 전진호 『일본의 한국병합 100년 한일관계의 과제와 전망: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한일갈등의 해결방안과 협력의 전망』 (2010년 8월)
- 정성장 『북한의 파워 엘리트 변동: 동향과 전망』 (2010년 8월)
- 최명해 『중국의 대북 정책: 변화와 지속』 (2010년 8월)
- 김재철 『중국과 동아시아 지역협력』 (2010년 7월)
- 이성우 『두만강 개발과 동아시아 다자협력의 전망: 동아시아
다자협력체의 건설을 중심으로』 (2010년 7월)
- 이애란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사회정착 현황과 조기정착 방안』
(2010년 7월)
- 안병민 『남북해운합의서상 통항 통제조치의 효과 및 전망』
(2010년 6월)
- 서상문 『한국전쟁의 국제정치적 의의와 현재적 함의』 (2010년 6월)
- 손병권 『오바마 행정부 등장 이후 미중관계의 전개양상과 전망』
(2010년 6월)
- 권태진 『북한의 식량위기: 배경 및 전망』 (2010년 5월)
- 오경택 『오바마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 평가 및 전망』 (2010년 5월)
- 김기석 『신 공동체 구상과 신아시아 외교』 (2010년 5월)

- 전성훈 『핵비확산 체제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한 합의』 (2010년 4월)
- 김석수 『해적과 해양안보: 소말리아 해적 문제를 중심으로』 (2010년 4월)
- 유달승 『이란의 권력구도와 정치운동 및 핵 문제』 (2010년 4월)
- 조동호 『통일비용 논의의 바람직한 접근』 (2010년 3월)
- 이영훈 『북한 경제난의 현황 및 전망』 (2010년 3월)
- 이선진 『동남아에 대한 중국 전략: 현황과 대응』 (2010년 3월)
- 문흥호 『마잉주 정부 출범 이후 양안관계의 변화와 지속』 (2010년 2월)
- 조성렬 『한반도평화협정 논의의 재등장 배경과 향후 전망』 (2010년 2월)
- 이종서 『EU의 대북정책의 특징: 규범적 권력 vs. 전략적 이익추구』 (2010년 1월)
- 박병광 『최근의 중국 군사력 발전 현황과 합의』 (2010년 1월)
- 송화섭 『일본의 군사전략과 군사력 증강 추세』 (2010년 1월)
- 고주현 『ARTE TV 정책형성 과정과 한중일 공동채널의 가능성 모색』 (2009년 12월)
- 김강일 『중국의 동북아전략과 대한반도정책』 (2009년 12월)
- 윤이숙 『한중일 환경산업기술발전과 정부의 역할』 (2009년 12월)



Jeju Forum for Peace & Prosperity

Community Building in East Asia



www.jejuforum.or.kr

제주포럼 기획단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제주평화연구원 (697-120)
Tel. 064-735-6532 또는 533 email. jejuforum@jpi.or.kr
homepage. www.jejuforum.or.kr

제주평화연구원은

2011년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해비치 호텔 & 리조트, 제주에서 '제6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을 주관하였습니다. 제6회 제주포럼은 '새로운 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New Asia for Peace and Prosperity)' 라는 대주제 아래 평화와 안보, 경제, 경영, 환경, 문화, 여성, 의료, 도시디자인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의제를 가지고 진지한 토론과 의견 교환을 통해 새로운 국제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아시아 지역내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6회 제주포럼은 김황식 국무총리, 아로요 필리핀 전대통령, 자오치정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외사위원회 위원장 등 국내외 고위인사 등이 참석하여 새로운 아시아 지역협력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었고, 64개 세션에 세계 22개국에서 해당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포럼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켰으며 중국 중견기업인 100여명을 포함, 국내외저명인사 1,800여명이 참여함으로써 규모면에서도 가장 큰 회의로서 종합국제포럼으로서 면모를 갖추고 성대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제6회 제주포럼 개최식에서 공식화된 바와 같이 이제 제주포럼은 격년제 개최에서 매년 개최하기로 되었으며, 이에 따라 제주평화연구원은 **제주포럼 기획단을 발족하여 2012년 5월-6월 중 제7회 제주포럼 개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주평화연구원은 앞으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이 명실상부하게 국내 최대의 종합국제포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7회 제주포럼 부터는 포럼의 의제와 목적에 동의하는 국내외 기관과 단체가 세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세션을 대폭 개방할 예정입니다. **제7회 제주포럼에 대해 귀기관과 귀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제주포럼에 대해서는 포럼 공식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포럼 참가문의는 제주포럼 기획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8월
제주평화연구원 제주포럼 기획단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2572 (697-120)

전화: 064)735-6500 팩스: 064)735-6512

E-mail: 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JPI 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